

## 희생자 179명 모두 가족 품으로... 끝나지 않는 추모 행렬

참사 일주일만에 유족에 모두 인도 장례 절차 진행  
로컬라이저 현장 조사 등 사고 원인 규명도 본격화  
광주·전남 8만5천여명 분향소 조문... 전국 30만명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179명의 희생자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범정부 차원의 수습 국면이 마무리되면서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가에도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모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2·3·12면

### ◇8일째 장례 절차도 마무리 전망

5일 국토교통부와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 중 178명의 시신이 유가족에게 인도됐다. 일가족 희생자인 나머지 3명에 대한 수습도 완료됐으나 인도는 유가족의 요청으로 6일 이뤄질 예정이다.

유가족 대부분이 시신을 인도받은 날부터 3일장을 치르고 있어 오는 7-8일째 장례 절차 역시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례식장과 화장장 상황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광주시와 전남도는 화장 시설을 확대 운영하며 6일부터는 참사 희생자가 우선 배정 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국토부·전남청 '투트랙' 조사

참사 당일부터 전남까지 이어진 시신과 유류품 수습을 위한 수색이 이날 공식 종료되면서 수사 당국은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소속 조사관들은 활주로 일대를 둘러봤다. 이 중 일부는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킨 요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를 살펴봤다.

앞서 격납고로 이송된 사고 항공기의 엔진 2개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랜딩기어가 작동되지 않은 이유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사고 직전 상황이 담긴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녹취록 작성은 전남 끝났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커넥터 손상으로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어려운 비행기록장치(FDR)는 6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로 보내진다.

조사위와 별개로 전남경찰청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3일 부산지방항공청 무안공항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무안공항 등을 압수수색한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하드디스크 등 압수품에 대해 분석 중이다.

### ◇광주·전남 합동분향소 연장 운영

광주시는 5·18민주광장에 설치·운영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이날 전일빌딩245 1층 실내로 이전에 연장 운영에 들어갔다. 전일빌딩245 합동분향소에는 희생자 179명의 위패를 모두 안치했다. 합동분향소 이전·운영은 희생자 유가족 대표와 협의해 결정했으며 운영 기간도 향후 유가족 측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전남도도 유가족의 요청을 반영해 국가에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오는 2월 중순까지 지역 합동분향소를 연장 운영한다.

연장 운영하는 전남지역 분향소는 무안국제공항, 무안스포츠파크, 전남도청이다. 22개 시·군중목포시·광양시·담양군·화순군·해남군·영광군·완도군 등 7개 시·군에서도 분향소 운영을 연장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기준 지역 내 합동분향소에는 광주 2만2천792명, 전남 6만2천306명 등 총 8만5천98명이 조문했다. 전국(17개 시·도 106개 합동분향소)에서는 총 30만명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특별취재반=김재정·변은진·안재영 기자



**공직자 합동 헌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가 애도기간은 끝났지만 광주·전남 17곳의 분향소가 연장 운영된다. 광주에서는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 설치됐던 합동분향소를 5일부터 인근 전일빌딩245 1층 실내로 옮겨 연장 운영 중이다. 연장 운영에 들어간 이날 오후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5개 구청장 등 공직자들이 합동으로 헌화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특별취재반=김에리 기자

## '내란 사태' 한 달...극한 대치 장기화

민주당,尹 사법처리 당력 집중... '특검법' 병행  
국힘, 공수처·야당 규탄 장외집회 카드 검토  
여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실패 놓고 공방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한 달째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전광훈'으로 상징되는 극우세력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세지면서 극한의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4·5·6면

이에 따라 원내 1당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윤 대통령 사법 처리와 이를 발판으로 삼은 탄핵소추안 인용을 관철, 조기 대선을 최대한 앞당기는 데 당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극렬 유투버 등 지지층에 보냈고, 이를 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의 반발로 불발됐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란 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와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등 당내 기구를 앞세워 계엄 사태의 진상을 알리는 여론전을 펴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로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관련 특검법 추진도 병행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 부결로 법안이 폐기돼도 즉시 재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란 국정특위' 2차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증인 채택도 추진한다.

반면, 국민적 공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란 수괴' 지킴기에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부 이탈표를 최소화해 두 특검법 모두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탄핵 정국' 대치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쌍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법아권 10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8표가 부족한 만큼 이번에도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관건이다.

여야는 쌍특검법과 별개로 6일이 유효 시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법원이 월권을 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공수처와 야당 규탄 장외집회 카드도 검토 중이다.

반면, 야당은 조속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를 '내란 사병'으로 규정하고 해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체포에 소극적이었다며 해당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b>Today</b>	
정시모집 마감...지역대학 희비	7면
광주 제조업 경기 전망 '흐름'	12면
양현종 가는 길 '역사가 된다'	16면

**본사 시령**  
▲최재호 부사장 (2025년 1월6일자)

지방자치 30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로운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